

---

민간 혁신 ·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 
**민간-공공기관 협력 강화방안**

---

2022. 9. 23

기 획 재 정 부

## 목 차

I. 추진배경 .....	1
II. 기본방향 .....	3
III. 세부 추진방안 .....	5
1. 공공기관 보유자원을 활용한 민간 성장 지원 ..	5
2. 전문성과 협업을 바탕으로 민간 지원 .....	10
3. 공공기관 규제·애로 관리체계 개편 .....	14
IV. 추진체계 및 일정 .....	15

## I. 추진배경

### 1. 새정부 공공기관 혁신

- 새 정부는 공공기관을 '작지만 일 잘하는 기관'으로 개편하기 위해 세 방향에서 혁신 중이며, ❶생산성 제고 및 ❷관리체계 개편은 既 발표

\* (생산성) 재무위험기관 집중 관리제(6.30),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(7.29)  
(관리체계) 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방안(8.18)

- 세번째 혁신은 공공기관이 가진 자산을 민간 성장과 역량 강화, 경제 활성화에 적극 활용하기 위한 ❸협력 강화방안에 초점

\* ❶중소기업, 스타트업 및 경제단체(중기중앙회, 벤처기업협회 등), ❷데이터, 특허 등 분야별 전문가, ❸공공기관 등 현장 목소리를 수렴하여 협력 강화방안 마련

### 2. 민간혁신 ·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공공기관의 역할 강화

#### ❶ 핵심 경제주체인 공공기관은 거대한 자원과 역량을 보유

- 공공기관은 SOC 등 국민 생활에 밀접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부 정책의 최일선 집행기관이자 우리 경제의 핵심 경제주체

- 사업 추진과정에서 축적한 총 969조원의 유·무형 자산과 연간 63조원 이상의 막대한 조달·구매력 등을 보유

\* 예산('21): 761조원(정부 예산의 1.3배), 조달·구매('21): 63조원(정부 조달의 1.5배),

- 국제적으로도 세계 3위 수준\*의 기업가치를 보유하면서 SOC, 에너지 등 각 분야에서 세계를 선도 중\*\*

\* 공기업 규모(OECD): (중국) \$2조 9,201.1억 (인도) \$338.5억 (한국) \$217.8억 順

\*\* (인천공항) 세계 공항서비스 평가 12년 연속 1위('05~'17),  
(가스공사) 세계 2위의 LNG 구매자('21) 등

## ② 급변하는 경영환경 속에서 민간의 혁신과 성장을 성공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**공공기관 보유자원의 적극적 활용이 요구되는 상황**

□ 민간은 최근 ESG 경영, 온실가스 감축, 중대재해 예방, 공급망 충격 등 복잡하고 어려운 경영환경에 직면

-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 등 민간은 現 경영환경 극복을 위해 공공기관의 적극적 지원을 희망

\* '민간성장 지원을 위한 공공기관 역할' 인식조사 ('22.7월, 공공기관연구센터)  
- 역할 확대 필요 응답률(%) : 국민 56.5, 공공기관 종사자 56.1, 전문가 50.5

□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은 본연의 역할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축적된 자원과 역량을 국민에게 되돌려줄 의무 존재

- 그간 공공기관은 민간 협력에 지속 노력해 왔으나, 민간 성장 기여도가 큰 데이터, 특허 등의 민간 개방·공유 노력은 부족

\* (데이터) '13년부터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개방 → 기관당 60.6건만 개방중('22.8월)  
(특허·실용신안) 7.0만건 보유 → 1.5만건(21.6%)만 활용중('22.8월)  
(시설) 체육시설 등 9종 시설 2,673개 개방 → 전체 시설중 개방률 21.3%('22.8월)

## ③ 지원체계 효율화와 함께, 기업 애로요인의 적극적 해소 필요

□ 민간 지원체계의 비효율성과 규제 해소에 대한 미온적 대응 등 국민 요구에 효과적으로 부응하고 있지 못하다는 평가

- 그간 공공기관의 민간 지원 노력은 일부 분야에 대한 분절적·단편적 지원 중심으로 진행

- 규제·애로 관리체계\*도 일부 기관에만 설치되는 등 제한적 운영

\* 기업성장응답센터: 중소기업이 공공기관과의 업무 중 겪는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'20년부터 공기업·준정부기관에 설치한 규제애로 해소 전담창구(총 125개 운영 중)

☞ **민간 중심의 경제 재도약을 위해 공공기관 자산·역량을 민간이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방·공유하고, 규제 관리체계 혁신 추진**

## Ⅱ. 기본방향

### 1. 공공기관 보유 자산 및 역량을 민간에 적극 개방·공유

- 개방 요구가 높은 데이터, 기술·특허, 편의시설 등을 민간이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방·공유 확대
  - 공공기관 자원을 민간이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방 이후의 사업화·판로 등 후속 단계까지 적극 지원
  - 중소기업에 위해 이미 추진하고 있는 우수기술·제품 구매, ESG 경영 지원, 해외진출 정보 제공 등은 지원 강화

< 세부 분야별 추진 방향 >

협력 분야	추진 방향
데이터	보유 데이터의 개방 확대 및 민간 활용 적극 지원
기술·특허	무료나눔 확대 및 유료 기술거래 활성화 환경 구축
시설·인프라	국민 편의를 위한 원스톱 예약시스템 구축 및 의무 등록제 실시
우수기술·제품	중소기업 완성품 구매에 더해, 연구개발 수요 매칭까지 지원
해외네트워크	기관간 협의체·플랫폼 등 통합지원체계(One-roof) 구축
ESG경영	중소기업의 온실가스 감축, 안전경영시스템 구축 등 지원

### 2. 공공기관간 협업체계 구축을 통한 민간 지원 시너지 극대화

- 공공기관간 협업과 통합적 지원체계를 통한 민간 협력 시너지 효과 창출을 위해 분야별 ‘공공기관 협의체’ 적극 구축
  - ①민간지원 효율화를 위한 공공기관간 협업 창구 단일화(통합 플랫폼 등), ②공공기관간 지원수단 연계 활성화

### 3. 기업의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규제 관리체계 개편

- 「경제 규제혁신 TF」를 통해 ①주무부처가 공공기관을 활용하여 행하는 규제 현황을 면밀히 파악, 개선방안 마련
  - 공공기관의 규제·애로 업무를 담당하는 기업성장응답센터의 활용도를 제고하여 ②공공기관의 자체적인 규제개선도 병행 지속

목표

- ▶ 공공기관이 보유한 자산·역량을 민간기업의 성장·혁신과 민간을 중심으로 한 우리 경제의 재도약 추진에 적극 활용

추진  
과제

1. 공공기관 보유자원을 활용한 민간 성장 지원

- ▶ **[데이터]** 국민이 원하는 데이터 중심의 개방 확대 및 민간 활용도 제고
- ▶ **[기술·특허]** 공공기관 보유 특허의 민간 활용도를 획기적으로 개선
- ▶ **[시설·장비]** 국민 여가 및 기업에 도움이 되는 유용한 시설·장비 개방 확대

2. 전문성과 협업을 바탕으로 민간 지원 시너지 창출

- ▶ **[구매 활성화]** 기술력 있는 중소기업 제품에 대한 소주기적 지원체계 구축
- ▶ **[해외진출 네트워크]** 온·오프라인 해외진출 협업체계 구축·활성화 등
- ▶ **[ESG경영 지원]** 중소기업의 온실가스 감축, 안전경영시스템 구축 등 지원

3. 민간의 경영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규제관리체계 개편

- ▶ **[실태조사 실시]** 부처의 공공기관을 통한 규제 실태 전면조사·개선
- ▶ **[규제발굴 체계 확대]** 기업성장응답센터 설치 확대 및 내실화
- ▶ **[인센티브 제공]** 규제개선 실적 경영평가 반영 강화

추진체계

❶ 공공기관 협업 확대

- ▶ '공공기관 협의체' 구성·운영 제도화
- ▶ 해외진출·규제개선 등 분야별 협의체 확대

❷ 강력한 인센티브 체계 구축

- ▶ 경영평가 반영
- ▶ 예산운영 자율성 확대
- ▶ 조직 인력 강화

### Ⅲ. 세부 추진방안

#### 1 공공기관 보유자원을 활용한 민간 성장 지원

##### 1. 데이터 개방

- ① 공기업·준정부기관이 보유한 데이터를 전면 개방하고, 수요자 맞춤형 데이터, 협업 데이터까지 추가 생산·공개

- ① (데이터 전면개방) 국민적 관심이 높은 의료·부동산·연금 등 10개 핵심기관\*을 선정하여 양질의 중요 데이터 선도적으로 개방('22.11월)

\* 심평원, 건보, 국민연금, 철도, 부동산원, LH, 도로공사, 한수원, 가스공사, 한전

기관명	데이터	기대효과
심평원	MRI, CT 등 의료영상 데이터	정상데이터와 이상데이터를 함께 분석해 특정 질환발생을 진단하는 인공지능 학습데이터 개발 등 사업화 가능
부동산원	청약/입주물량 데이터	청약 및 입주 물량 데이터를 활용한 부동산정보 산업 콘텐츠 개발 및 중개·이사·가전·인테리어 수요 예측 등 사업화 가능
건보공단	인플루엔자, 천식, 아토피 등 데이터	빅데이터 활용한 의료수요 예측 및 감염병 확산예측 모델 개발 및 사업화 가능
철도공사	철도고객 관광패턴 데이터	지역별 철도이용객의 선호 방문지 등 관광패턴 데이터 제공을 통해 여행업계와 지역상권의 마케팅전략 개발 가능
LH공사	토지시세 데이터	LH토지 낙찰가, 인근 토지 공시지가 등을 결합해 분양토지 낙찰가 등 예측 서비스 제공 및 사업화 가능
국민연금	지역별 국민연금 연금종별 수급자현황	고령자를 위한 금융이동서비스 등 민간서비스 개발에 활용하여 연금수급자의 복지 증진 가능

- '공공기관 데이터 개방 TF\*'를 설치('22.10월)하여 산업·금융·환경 분야 등 국민이 원하는 중요 데이터의 추가 개방 추진

\* 기재부(재정관리관), 데이터 전문가 및 공공기관(NIA) 등 참여하여 데이터 개방 수요조사, 개방 기준 수립, 각 공공기관과의 데이터 개방 협의 등 담당

- 공공기관 데이터 개방을 저해하는 관행, 규제 발굴·철폐도 추진

\* 공공기관이 데이터 개방시, 걸림돌이 되는 법령, 소극적 법령해석 관행 등

- 정부의 공공데이터 개방 정책방향\* 및 데이터 개방기준  
(네거티브 방식\*\*등)에 맞춰 기관별 원천 데이터\*\*\*도 개방 확대

\* 디지털플랫폼정부위, 공공데이터전략위, 국가데이터정책위 등과 정책 협조

\*\* 일정 유형의 데이터를 제외하고는 모두 개방 및 공유

\*\*\* 공공기관 고유업무와 관련된 중요 데이터를 구성하는 하위 수준의 데이터 등

- 개인정보 비식별화 등을 포함한 기관별 자체 개방계획 수립 후, 공공기관 데이터 개방 TF 논의를 거쳐 '23.1분기부터 본격 개방

## ② (민간 수요 맞춤형 개방) 민간이 필요한 데이터를 신청하면 공공기관이 가공·개방하는 '민간수요 맞춤형 개방 체계' 구축('23.1분기)

- 가공 능력이 부족한 민간의 데이터 수요에 적극 대응하여 데이터의 질적 수준 제고 및 민간의 비즈니스 창출에 기여



- 국민이 원하는 우수데이터 개방을 지속 유도하기 위해 既 개방한 데이터의 가치를 평가·공개하는 '데이터 등급제'도 도입

\* 데이터 활용도(조회수, 프로그램 개발 이용 등)를 기준으로 데이터 등급 설정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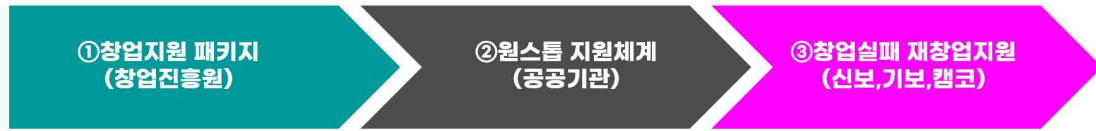
## ③ (협업데이터 공동생산) 공공기관간 협업이 필요한 데이터를 지속 발굴·개방할 수 있도록 기관간 협력체계 구축('23.2분기)

- 공공기관 또는 민간의 요청에 따라 다수 기관이 각각 소유한 데이터를 결합하여 활용도가 더 큰 데이터를 민간에 제공





② 데이터 활용 우수 아이디어에 대한 창업 지원, 사업 실패시 재창업 지원 등 현행 제도를 효율화하여 민간의 데이터 활용 적극 유도



① **(창업자금 지원)** 공공기관 데이터를 활용한 창업시, 사업화자금·교육·인큐베이팅 등을 지원하는 창업 지원 패키지 지원

\* 창업진흥원이 운영 중인 예비창업패키지, 초기창업패키지 지원대상 선발시, 창업자금(최대 1억원), 맞춤형 창업교육 및 창업 멘토링 등 지원

② **(공공기관 원스톱 지원체계 구축)** 공공기관별로 창업자를 직접 돕는 데이터 활용 창업지원체계 구축·운영('23.1분기)

- 全 공기업·준정부기관에 창업자에게 맞춤형 데이터 제공 등 원스톱 서비스를 지원하는 '데이터 창업지원 서포터즈' 지정
- 지적재산권 보호 컨설팅(특허정보원 등), 민간투자 유치 설명회(창업진흥원 등) 등 각 공공기관의 기존 특화지원제도 강화

사업화 기획	특허등록	투자 설명회	해외진출
창업진흥원	특허정보원 등	창업진흥원	코트라·수은

③ **(재창업 지원)** 우수 아이디어로 선정된 창업이 실패하더라도 재기 지원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재창업 적극 유도('23.1분기)

- (신용·기술보증기금) 공공기관 데이터를 활용한 창업기업이 폐업 등 어려움을 겪는 경우, 재기 지원을 위한 보증료, 보증비율 등 우대
- (자산관리공사) 창업 실패기업이 잔여채무로 인한 신용불량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'특수채무자감면대상'에 포함

\* 특수채무자감면대상 포함시 창업실패기업의 채권 매입과 채무감면 가능

## 2. 특허·실용신안 개방

### ① 공공기관 보유 특허·실용신안을 민간이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무료 기술이전 확대

○ **(무료나눔)** 공공기관 미활용 특허·실용신안중 민간 수요가 높은 의료·바이오·통신 등을 중심으로 무료나눔\* 확대 추진

- 우선 '23년까지 미활용 특허·실용신안(5.5만건\*) 20% 무료나눔 추진

\* 공공기관 보유 특허·실용신안 7.0만 건중 1.5만 건은 유료 거래중('22.8월)

- ①기업이 선호하는 분야를 고려하여 무료나눔 대상 확정, ②공고를 통해 민간 수요발굴, ③기관과 희망기업간 양질의 기술이전 추진

⇒ 20% 이전시, 민간에 1조원 규모의 경제적 파급효과 발생

### ② 공공기관으로부터 특허·실용신안을 유료 이전 받은 중소기업의 사업화부터 판로까지 원스톱 지원 강화

① **(기술이전비 지원)** 공공기관 특허 등을 구입하는 영세 중소기업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이전비용 지원 검토

② **(후속 R&D 및 컨설팅 지원)** 공공기관 특허 등을 이전받은 중소기업이 제품화 추진시, 후속 R&D 자금 및 기술 컨설팅 지원

- 재무 여건이 취약한 스타트업 및 영세 중소기업에게 후속 R&D 및 이차보전 지원

- 특허를 이전한 공공기관이 영세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에게 사업화에 필요한 노하우 및 기술 컨설팅 실시

③ **(판로 지원)** 공공기관 특허를 활용하여 제품화에 성공한 경우, 특허를 이전한 공공기관에서 우선 구매 추진

- 공공기관 특허 활용 제품을 기술마켓\*에 등록·심사시, 가점 부여

\* 공공기관의 우수 중소기업 제품 구매를 확대하기 위해 '19년부터 운영 중인 플랫폼

### ③ 기술중개기관 역량 강화, 기술료 거래 방식 개편 등을 통해 공공기관 보유 특허·실용신안의 **기술거래 활성화** 촉진

#### ① **(중개기관 역량 강화)** 민간 중개기관\*의 역량 강화를 위해 공공 중개기관이 중개 과정을 민간과 함께 진행하며 노하우 전수

\* 민간 중개기관은 전체 기관(157개)중 92.4%(145개)이나, 중개 실적은 41.0%('21)

#### ② **(기술료 거래방식 개편)** 사업화 실패에 따른 기업 부담 완화를 위해 정액기술료 방식에서 경상기술료 방식\*으로 적극 유도

\* 경상기술료 비중 : 한국 13.6%, 일본 32.5%, 미국 66.9%

\*\* ①(정액기술료) 기술 이전시점에 기술료를 지급하는 방식, 사업화 실패시 큰 부담

②(경상기술료) 매출 발생시점에 기술료를 지급하는 방식, **사업화 실패 부담 완화**

## 3. 보유시설·장비 이용 편의성 제고

### ① 공공기관 전체 편의시설에 대한 **개방시설 의무 등록제 시행**

#### ○ **(등록방식 변경)** 현재 권고 형태로 운영 중인 개방시설 등록 방식을 의무제로 변경하여 각 기관의 시설 개방을 확대

\* 9개 유형 전체 보유시설 1만 2,525개 중 2,673개(21.3%)만 개방 중('22.8월)

- 상시 사용, 보안시설 등 개방 곤란시설은 등록대상에서 제외

- 우수 시설개방기관에 대해 인센티브를 강화하고, 통합공시 및 경영평가 등과의 연계\*를 통해 제도의 실효성 확보

\* 통합공시 무벌점 수정기회 부여, 공공기관 보유 시설과 장비 이용·편의제공 노력 등 평가

### ② 민간의 공공기관 시설·장비 이용 편의를 위해 **통합예약시스템 구축**

#### ○ **(원스톱 통합예약 추진)** 모든 공공기관의 편의시설 및 장비를 한 곳에서 예약할 수 있는 '원스톱 통합예약 체계' 구축

- (1단계) 알리오플러스에 원스톱 통합예약시스템 개통('22.12월)  
(2단계) 시스템 고도화 및 예약앱(APP) 개발('23년초)

## 1. 기술력 있는 제품 등의 구매 활성화

### ① 우수 중소기업 제품 구매에 더해 연구개발 수요 매칭까지 지원

- 그간 공공기관들은 기술마켓 플랫폼\*을 통해 기술력 있는 중소기업 제품·기술을 구매함으로써 기업의 판로를 지원중

#### < 공공기관 기술마켓 플랫폼 >

- ① (개요) 공공기관의 기술력 있는 중소기업 제품 구매 플랫폼, '19년부터 시작  
- 공공기관들이 협업하여 기술제품 공동 인증 → 기술마켓 플랫폼 등록 → 공공기관 구매
- ② (실적) 총 55개 기관이 참여, 우수 중소기업 제품 2,897억원 구매('22.2분기 누적)
- ③ (경과) 분야별 순차 개통중: SOC분야('19.6) → 에너지분야('20.10) → ICT분야('21.12)

- 기존 완성품만 구매해 온 기술마켓 플랫폼에 공공기관 연구개발 수요와 기술력 있는 중소기업을 매칭하는 기능 추가  
- ①공공기관이 먼저 희망 제품·기술 사양 제시, ②기술력을 가진 기업을 연결하여 기업의 제품·기술 개발 및 판로까지 보장

### ② 우수 중소기업의 제품개발, 실증테스트 및 판로 등 적극 지원

- 정부·공공기관의 R&D 과제를 추진하거나, 실증 테스트\* 등을 추진하는 '공공기관 기술마켓' 참여 기업에게 인센티브 부여

\* 연구개발 성과를 검증하는 단계로, 기술사업화 이전에 실시하는 성능테스트

#### ① (연구개발) 기술마켓 참여 공공기관의 구매를 전제로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우수 중소기업에게 연구비 지원

\* (구매 조건부 기술개발) 공공기관이 구매 동의·확약의사를 밝히고 연구개발을 제안한 과제에 대해 중소기업이 R&D 수행

- 공공기관 대상 수요조사를 실시한 후, 공공기관이 희망한 제품 사양대로 제품 연구·개발을 추진하는 중소기업에게도 연구비 지원

\* (국민생활안전 긴급대응 연구) 공공기관 수요조사와 연구기관·시민 등 의견 수렴을 거쳐 과제 선정후, 중소기업이 R&D 수행

**② (실증·사업화)** 정부 R&D를 통해 개발한 제품의 사업화를 위한  
후속 R&D\* 지원, 성능시험을 위한 K-테스트베드 연계\*\*

\* (범부처 이어달리기) 정부 R&D 사업을 통해 개발된 기술의 사업화 성공률  
제고를 위해 후속 R&D 자금을 지원

\*\* (K-테스트베드) 공공기관이 보유한 실증 인프라를 민간의 신기술 시험에 제공

**③ (공동 R&D 활성화)** 기술마켓 참여 공공기관과 중소기업 간  
공동연구 확대(공공기관 자체 예산)

---

**③ 통합 플랫폼 구축을 통한 지원 프로그램 연계 및 고도화**

---

- 중소기업이 R&D 등 각종 지원 프로그램 정보를 편리하게  
확인·이용할 수 있도록 ‘공공기관 통합 지원 HUB\*’ 구축

\* R&D(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·한국연구재단), 금융(기보·중진공) 등 각 분야별 전문  
기관이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중소기업의 수요를 발굴하고 매칭

## 2. 해외 진출 및 수주 지원 협업 네트워크 구축

---

**① 공공기관간 협력을 위한 분야별 오프라인 협의체 구축**

---

- 민간기업의 해외진출 및 수주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 
해외진출 각 분야별\*로 공공기관 협의체 구축

\* 수출, 투자·창업, 해외 프로젝트 수주, 자원개발, ESG 등

- ①기관별 전문역량에 따른 역할 분담, ②협업체계 구축, ③지원  
수단 연계, ④거점지역 선정 등 전략적·체계적 지원 추진

**< (예시) 해외 프로젝트 수주 협의체 >**

- (체계) 해외수주협의회(기재부 주재) 산하 공공기관간 ‘해외 프로젝트 협의체’ 구성
- (사업발굴) 우리기업 진출 가능성이 높은 전략지역을 중심으로 프로젝트 발굴
- (금융지원) EDCF-EDPF-수출금융 등 지원수단을 총동원한 맞춤형 복합금융구조 설계
- (역할분담) 사업정보(KIND-KOTRA)→재원조달(수은)→프로젝트 건설·운영 기술지원(도공수공 등)

## 2 해외진출 지원 플랫폼 활성화 등 공공기관간 협업체계 강화

- **(해외진출정보 제공)** 해외정보 사각지대 해소 및 맞춤형 제공을 위해 통합 해외진출 정보 플랫폼에 대한 공공기관 참여 활성화
  - 해외경제정보드림\*(dream.kotra.or.kr)에 참여하는 ①공공기관 수 및 ②기관별로 특화된 해외진출 정보 제공 확대
    - \* '20년 구축해 현재 79개 정부 부처·지자체·공공기관 참여중(공공기관 25개), 해외시장·투자·조달 등 해외진출 정보 통합 제공(KOTRA)
  - ③한 곳에서 해외진출 정보 통합 문답이 가능하도록 시스템 개선
- **(해외마케팅 지원)** 우수품목·바이어 발굴, 거래알선 등을 위한 온라인 수출 플랫폼에 공공기관의 노하우·네트워크 제공
  - 고비즈 코리아(Gobiz-Korea)\*에 공공기관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①품목별·지역별 우수상품 발굴, ②해외 바이어 검증·선별 등 지원
    - \* B2B 플랫폼으로 30만 해외 바이어에게 한국 중기제품 홍보-거래알선(중진공)
- **(글로벌 수요 매칭)** 해외 유명 글로벌 기업의 혁신기술 수요와 국내 유망기업을 공공기관을 통해 매칭 추진
  - 글로벌 오픈이노베이션 진입 지원사업\*과 공공기관이 운영중인 국내 스타트업 육성 프로그램을 적극 연계
    - \* '21년 117개 글로벌 기업의 223개 수요 발굴(KOTRA)
  - 실증 테스트 지원과 사업화 및 R&D 자금도 연계

### < (예시) 기관별 스타트업 육성 프로그램 >

- (창업진흥원) 소부장 스타트업100 : 사업화 및 R&D 자금 지원, 대기업 멘토링 등
- (인천공항공사) 인천스타트업파크센터 : 사무공간 제공, 실증 지원, 우대보증 등

### 3. 중소기업의 ESG 경영, 온실가스 감축, 안전경영 구축 지원

#### ① 중소기업의 ESG 경영 도입 등을 선도적·체계적으로 지원

- **(공기업)** 자체적으로 ESG 경영 도입에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출자기관 및 협력업체에게 ①ESG 컨설팅 실시
  - ②환경·윤리경영 준수를 위한 MOU 체결, ③ESG 경영수준에 대한 주기적 점검, ④개선계획 수립·이행 등을 지원
- **(한전KDN)** 협력사와 ESG지원사업 협약을 체결하고 1억원의 상생협력기금 출연, 업종·기업별 맞춤형 ESG평가지표 개발, ESG교육 및 역량 진단, ESG인증 취득 등을 지원('21.6월)
- **(중소기업 지원 공공기관\*)**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초기 진입단계 중심으로 전문 ESG 컨설팅 프로그램 운영
  - \*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,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, 창업진흥원, 기술보증기금 등
  - ESG 경영기획·평가대응을 위한 사내 전문가 육성 프로그램, 수출기업 및 하도급 기업에 대한 특화교육 등
- **(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)** 탄소바우처를 신설하여 에너지사용·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탄소중립 컨설팅 지원 및 기술지원('22년 172억원, 500개사 지원)

#### ② 환경·안전 등 분야별 정보 제공 (환경공단, 산업안전보건공단 등)

- **(환경)** 중소기업에 필요한 환경분야 법·제도 등 관련 정보를 ESG 정보 플랫폼(예: 환경책임투자 종합 플랫폼)을 통해 맞춤형 제공
  - **(환경공단)** 주류수입업체에 자원순환분야 전반 법령·제도 등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, 재활용·친환경포장 관련 교육 및 컨설팅 등을 제공하기로 업무 협약 체결('21.12월)
- **(안전)** 산업안전보건공단을 중심으로 고위험 사업장을 보유한 중소기업에게 안전관리체계 구축 전반을 컨설팅
  - 「공공기관 CEO 안전 교육」 프로그램(우수사례 포함)을 민간기업도 활용 가능하도록 알리오플러스([alioplus.go.kr](http://alioplus.go.kr))에 공개('22.11월)
- **(남부발전)** 협력사까지 포함한 직원의 안전교육을 실시하고, AI기반 영상분석으로 위험요소 모니터링, 이동형 CCTV 통해 관제 사각지대 해소·안전관리등급 2년 연속('20~'21년도) 2등급 "양호"



### ① 공공기관을 통한 각 부처 규제 실태조사·개선 등 규제혁신 추진

- **(실태조사)** 각 부처가 법령 등에 근거하여 공공기관을 통해 행하고 있는 전체 규제현황 파악
- **(규제개선)** 민간이 참여하는 「경제 규제혁신 TF\*」를 활용하여 공공기관과 관련된 부처 규제 발굴 및 해결방안 강구

\* 경제부총리를 포함한 정부위원 11명, 민간위원 12명으로 구성, 경제분야 규제 혁신 및 분야별 핵심규제 개선안 발표

- 現 경제 규제혁신 거버넌스\*를 기반으로 공공기관 규제개선 과정에서 주무부처의 역할 강화

\* 경제 규제혁신 TF - TF 內 7개 작업반 - 부처별 규제 TF의 추진체계 운영

### ② 공공기관의 자체 규제애로 발굴 시스템을 **全 공공기관으로 확대**

- **(규제 발굴 창구 확대)** 공기업·준정부기관만 설치·운영중인 기업성장응답센터\*를 기타공공기관까지 확대 설치

\* 중소기업이 겪는 규제·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에 '20년부터 설치한 규제 애로 처리창구(총 125개 기관이 중소기업 옴부즈만과 공동운영중)

- **(규제개선 요구주체 확대)** 공공기관 규제 개선사항을 폭넓게 파악하기 위해 요구주체를 중견·대기업까지 확대

\* 현재는 중소기업 위주로 기업성장응답센터에 규제·애로 개선 요구

### ③ 공공기관의 규제개선 인센티브 및 역량 강화

- **(인센티브)** 기업성장응답센터 설치 여부와 함께 운영 실적이 평가되도록 現 평가지표\*를 구체화하고 배점 확대 등 검토

\* (현재) '기업성장응답센터 운용'만 평가 → (개선) '기관의 규제개선 노력 및 실적, 기업성장응답센터 운영실적'으로 구체화

- **(역량제고)** 공공기관의 규제개선 역량 제고를 위해 기업성장응답센터 직원에 대한 온·오프라인 형태의 역량교육 실시



## IV. 추진체계 및 일정

### 1 추진체계

- ① **(공공기관 협업체계 제도화)** 민간 지원 사업의 체계적 운영 및 참여 기관간 협업 강화를 위해 ‘공공기관 협의체’ 확대·개편\*

\* 現 ‘공공기관 혁신지침’상 협의체는 중소기업 기술·제품의 구매 지원에 한정

- 해외진출, 규제개선, 데이터 등 각 과제별로 공공기관이 자율적으로 협의체를 구성·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
- 협의체별 사업계획 및 실적은 연 1회 이상 공운위에 보고

현 행	추 가(예시)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▸ 기술마켓 협의체</li> <li>▸ K-테스트베드 협의체</li> </ul>	⇒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▸ 해외진출 협의체</li> <li>▸ 규제개선 협의체</li> <li>▸ 데이터개방 협의체 등</li> </ul>

- ② **(인센티브 제공)** 경영평가 반영, 예산운영 자율성 확대 등

- ① **(경영평가 반영)** 민간협력 사업 참여에 대한 경영평가 항목을 신설하여 공공기관의 적극적 참여 유도(‘23년도 편람)

- ‘상생·협력 및 지역발전’ 지표에 ‘민간-공공기관 협력을 위한 노력과 성과’ 평가를 추가

\* (특허·실용신안) 미활용 특허 공유 및 기술이전 추가  
(규제개선) 기관의 규제개선 노력 및 실적, 기업성장응답센터 운영실적 추가  
(시설 공유) 공공기관 보유 시설과 장비의 이용·편의제공 노력과 지원 추가

- ‘국민소통\*’, ‘전략기획 및 혁신\*\*’ 등 기존지표와 연계 강화

\* (데이터 공유) 공공데이터의 공유·개방·활용 성과를 별도항목으로 평가

\*\* (협의체 운영) 공공기관 협의체 운영 추가

- ② **(예산운영 자율성 확대)** 사업 추진에 따른 재원이 부족할 경우, 유휴 재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예산집행지침 등 개정 추진

- ③ **(조직·인력 강화)** 민간협력 추진에 필요한 인력 재배치 등 검토

과제	추진시기
<b>【공공기관 보유자원을 활용한 민간성장 지원】</b>	
▪ 공공기관 데이터 개방 및 활용 확대	
- 중요 공공기관 데이터 선도개방	<b>단기</b> ~22.11월
- 공공기관 원천데이터 개방	<b>중장기</b> 23.1분기~
- 민간수요 맞춤형 개방	<b>중장기</b> 23.1분기~
- 협업데이터 공동생산	<b>중장기</b> 23.2분기~
- 공공기관 데이터 민간활용 활성화 촉진	<b>중장기</b> 23.1분기~
▪ 특허·실용신안 개방	
- 미활용 특허권 무료 기술이전	<b>중장기</b> ~23.下
- 특허 사업화 과정 One-Stop 지원	<b>중장기</b> 계속
- 민간기술거래 기관 역량 강화	<b>중장기</b> 계속
- 경상기술료 거래방식 확대	<b>중장기</b> 계속
▪ 보유 시설·장비 이용 편의성 제고	
- 공공기관 전체 편의시설에 대한 의무 등록제 시행	<b>단기</b> ~22.下
- 시설·장비 이용 편의를 위해 통합예약시스템 구축	<b>단기</b> ~22.下
<b>【전문성과 협업을 바탕으로 민간지원 시너지 창출】</b>	
▪ 기술력 있는 제품 등의 구매 활성화	
- 통합지원 HUB 구축	<b>단기</b> ~22.下
- 기술마켓 연계 정부 R&D 사업 신규 공모	<b>단기</b> ~23.上
▪ 해외진출 및 수주 지원 협업 네트워크 구축	
- 공공기관간 협력을 위한 분야별 오프라인 협의체 구축	<b>단기</b> ~23.上
- 해외진출 지원 플랫폼 활성화 등 공공기관간 협업체계 강화	<b>중장기</b> 계속
▪ 중소기업의 ESG 경영 지원	
- 공공기관 CEO 안전혁신 교육 프로그램 알리오 플러스 공개	<b>단기</b> ~22.下
<b>【공공기관 규제·애로 관리체계 개편】</b>	
▪ 공공기관 관련 각 부처 규제 실태조사	<b>단기</b> ~22.下
▪ 기업성장응답센터 설치 확산	<b>단기</b> ~23.上